

2026

#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1 문화유산법, 자연유산법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  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1시간 51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도서명 : 국가유산관련법령1

ISBN : 979-11-7393-098-0

발간일 : 2025-11-04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14,500원



# 국가유산관련법령1

## [목차]

### 제1편 총론(p8)

#### 제1장 총칙(p8)

####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(p13)

#### 제3장 보호의 기반 조성(p17)

#### 제4장 지정 및 관리(p23)

### 제2편 문화유산법(p58)

#### 제1장 총칙(p59)

####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(p65)

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(p71)

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(p98)

제5장 일반동산문화유산(p117)

제6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(p127)

제7장 국외소재문화유산(p130)

제8장 시·도지정문화유산(p134)

제9장 문화유산매매업 등(p134)

제10장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(p142)

제11장 보칙(p147)

제12장 벌칙(p155)

### **제3편 자연유산법(p165)**

제1장 총칙(p165)

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

추진(p169)

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(p175)

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, 관리 및 활용(p193)

제5장 보칙(p205)

제6장 벌칙(p208~213)

## [약어]

- 청장은 국가유산청장
- 유산청은 국가유산청
- 중앙기관장은 (관계) 중앙행정기관의 장
- 부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
- 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, 군, 자치구
-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군구
-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- 보호물/구역은 보호물, 보호구역
- 보존등은 유산 보존, 관리, 활용
- 소유자등은 소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

- 지능정보는 문화유산지능정보
- 임시지정유산은 임시지정문화유산
- 업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- **국가지정문화유산(이하 국가지정유산)**은  
청장이 지정

- **시도지정문화유산(이하 시도지정유산)**은  
시도지사가 지정

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

붉은색은 시행예정

하늘색은 2025년 기출문제 지문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 제1편 총론

### 제1장 총칙

#### 1. 정의



## 가. 보호물

-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한 건물/시설물
-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/고시된  
건물/시설물

## 나. 보호구역

### 1) 문화유산

- 지상 고정 유형물이나 일정 지역이  
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문화유산 점유  
면적을 제외한 지역
- 지정문화유산 보존, 관리, 정비를 위해 지정

### 2) 자연유산

- 일정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 
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
- 천연기념물등 보호를 위해 지정/고시

## 다. 역사문화환경

- 문화[자연]유산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,  
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
- 문화[자연]유산과 함께 보호 필요

## 2. 보호의 기본원칙

가) 문화유산은 원형유지

나) 자연유산

- 인위적 간섭 최대한 배제, 자연적 변화 등  
고유 특성 반영

-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
-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

### 3. 국가등의 책무

가) 국가등은 개발사업시 유산, 보호물/구역, 역사문화환경 훼손 않도록 노력

- 문화유산은 국민, 자연유산은 소유자등은 국가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

나) 문화유산

- 국가는 보존등 종합 시책 수립/추진
- 지자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보존등 시책 수립/추진

다) 자연유산

- 국가등은 보존등 시책 수립/시행

#### 4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가) 문화유산[자연유산] 보존등에 관해 다른  
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 
문화유산법[자연유산법] 따름

나) 문화유산

- 지정문화유산(임시지정유산 포함) 수리, 실측,  
설계, 감리와 매장유산 보호/조사,  
근현대문화유산 보존/활용은 따로

법률(국가유산수리법)으로 정함

다) 자연유산

-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법,

국가유산수리법, 매장유산법 따름

- 천연기념물 아닌,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

동식물은 법 적용안함

##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

1. **문화유산기본계획**(이하 기본계획)과

자연유산 **보호계획**(이하 보호계획)

- **청장은**,

가. **중앙기관장 및 (시군구가 아니라)**

# 시도지사와 협의 거쳐 5년마다 수립

나. 수립시 다음 의견 청취

1) 소유자등

2) 전문가

- 문화유산위, 자연유산위 위원

- 문화/자연 유산 전문 지식, 경험 가진

청장이 고시하는 자

다. 수립하면 시도지사에 알리고, 관보 등에  
고시

라. 필요시 시도지사에 자료 요청

## 2. 시행계획

가) 청장/시도지사는 기본계획[보호계획]에

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/시행

- 수립한 때 공표
- 2월말일까지 유산청 및 시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

나)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1월 31일까지 청장에 제출

### 3. 문화[자연]유산위원회

- 가) 유산청에 둔다
- 나) 분과위 둘 수 있다
- 다른 분과위와 합동분과위 열 수 있다
- 분과위/합동분과위에서 조사/심의한 사항은 문화[자연]유산위 조사/심의 의제

### 4. 시도 문화[자연]유산위원회

가. 시도에 둔다

나. 조직/운영은 조례로 정하되, 다음 포함

- 보존등 조사/심의
- 위원 위촉/해촉
- 분과위 설치/운영
- 전문위원 위촉/활용

다. 시도지사가 청장에 다음 요청시 위원회

사전 심의 거침

1) 문화유산위

- 문화유산의 국가지정유산(보호물/구역 포함)

지정/해제



-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/말소

## 2) 자연유산위

- 천연기념물, 명승(보호물/구역 포함)

지정/해제

라. 시도자연유산위 존속기한은 2026년 5월  
17일

## 제3장 보호의 기반 조성

### 1. 건설공사시의 보호

- 건설공사로 문화유산, 천연기념물등 훼손,  
멸실, 수몰 우려시나,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 
필요시 공사 시행자는 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

## 조치

-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

## 2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이하 보존지역)

- 약식영향진단은 25년 2월 14일 시행

가. 시도지사가 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해야 함

- 동산은 제외한 지정문화유산, 종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

나. 행정기관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전

약식영향진단 실시 의무

- 예외) 영향진단 실시한 때

다. 범위는 유산 외곽 경계에서 500m내

- 유산 가치와 보호, 주변 환경 고려

- 500m 밖에서 공사시 유산에 영향을 미칠  
것이 확실하면 500m 초과 가능

라.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

시도지사는 유산 보존에 영향없으면 보존지역  
범위를 기존 대로 유지

- 문화유산은 청장과 협의 요

마. 구체적 행위기준

## 1) 유산 지정 6개월내 고시

- 청장이 국가지정유산 지정,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시,
- 청장/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등 지정시 고시

## 2) 자연유산은 다음 행위 기준 고시

### 가) 경관 저해 우려

- 건축물/시설물 설치, 증설
- 수목을 심거나 제거

### 나) 보존에 영향

- 소음, 진동, 악취 유발
- 대기오염물질, 화학물질, 먼지, 빛, 열 방출
- 지하 50m 이상 땅파기
- 토지, 임야 형질 변경